

독일의 물가상승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격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코로나19 대응정책들이 점차 철회되어 오프라인 경제활동이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재유행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례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정책적 혼란은 정리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마비된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실시하였던 정책의 영향은 여러 가지 변수와 맞물리면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독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독일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봉쇄조치를 취하며 이에 상응하여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비롯한 유동성 확대와 같은 경제지원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가 및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 2021년 말을 지나며 잠시 주춤하긴 하였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과 6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8% 수준(5월 : +7.9%, 6월 : +7.6%)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2022년 7월(+7.5%)에도 물가 인상률이 감소하며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유지될 것처럼 보였던 독일의 물가 인상률은 2022년 8월 다시 +7.9%를 기록하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니라 가계경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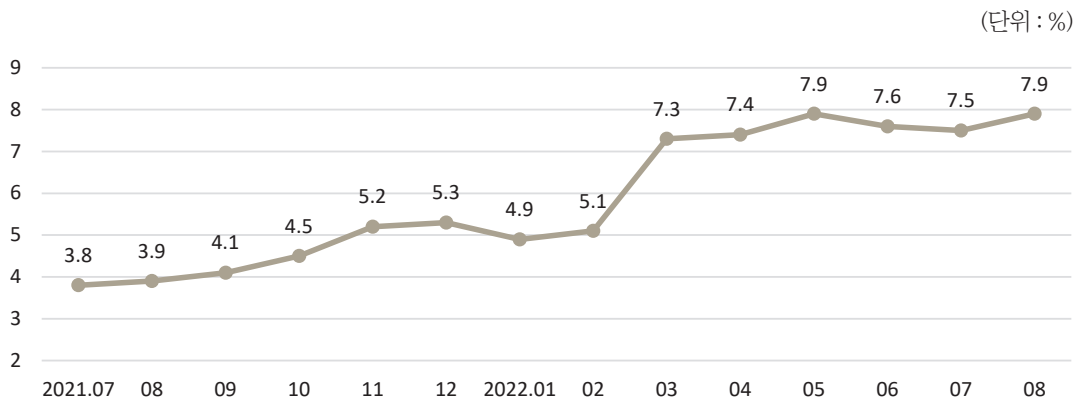
크지만,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기업의 부담 역시 가중되면서 물가 수준에 연동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상황

독일의 2022년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9% 상승하며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소비자 물가 수준이 비정상적인 수준을 기록하자 2022년 6월 독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 소비자 물가 완화정책을 긴급히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물가 상승률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감소폭은 6월에 -0.3%p, 7월에 -0.1%p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6, 7월 각각 +7.6%, +7.5%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7.9%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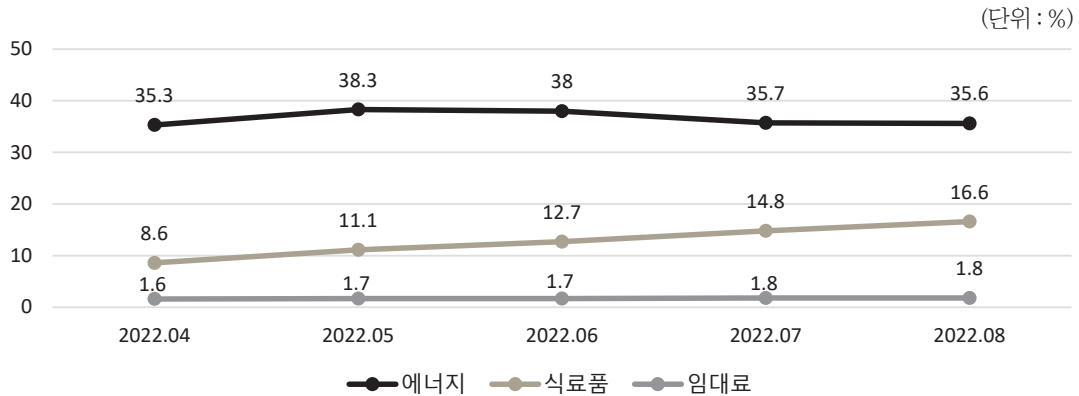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지적되고 있다. 2022년 7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5.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6월(+38%)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에너지 가격 중 전기요

[그림 1] 독일 월별 소비자 물가 인상률



자료: destatis(2022), “Gesamindex und 12 Abteilungen”, <https://www.destatis.de/> (2022.8.22).

[그림 2] 주요 부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 destatis, "Inflationsrate im August 2022 voraussichtlich +7,9 %", 2022.8.30.

금은 2022년 7월 들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8.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6월 22% 인상을 기록하였던 전기요금은 그나마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던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¹⁾이 잠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연료 가격도 2022년 5월 +41.0%, 6월 +33.2%를 기록한 바 있으나 6월부터 유류세 할인정책이 시행되어 인상률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23.0%를 기록하였다. 한편 난방용 경유 가격은 2021년 7월 대비 두 배 이상(+102.6%) 상승되었으며, 천연가스 가격은 7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 가격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상을 기록하고 있는 요인은 복합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공급 가격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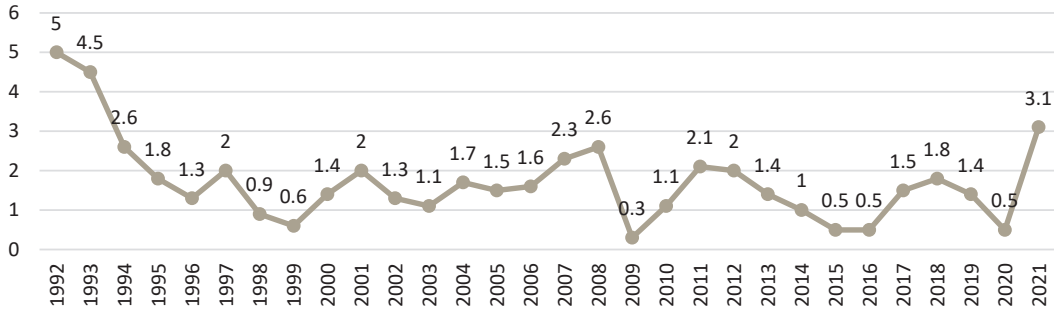
전체 물가 인상률을 비롯하여 에너지 가격의 경우에는 5월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가계경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은 2022년 7월에는 +14.8%, 8월에는 +16.6%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가계경제에 직접적

1)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은 독일에서 지난 2000년 시행된 일종의 환경관련 부담금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징수된 재원은 태양열, 풍력, 유기화합물 및 수력 발전소를 확충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2) destatis, "Inflationsrate im Juli 2022 erneut leicht abgeschwächt bei +7,5 %", 2022.8.10.

[그림 3] 독일 연간 물가상승률

(단위 : %)



자료 : destatis(2022), “Verbraucherpreisindizes für Deutschland Lange Reihen ab 1948”, <https://www.destatis.de/> (2022.8.22).

인 부담을 주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을 제외하면 2022년 7월의 물가 상승률 수치는 절반 이하인 +3.2%까지 내려간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수치에 비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정권의 탄생 배경 중 하나로 당시의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를 비롯한 세계 사회는 비정상적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독일 통일 후 일시적으로 약 5%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은 적이 없었다.

■ 독일의 임금 수준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

독일이 여러 차례의 국내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정적인 집단적 노사관계가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산업별 협약 체계를 근간

으로 하는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물가와 연동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또는 일부 산업 분야의 지역별 또는 전체 연방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체협약 체계는 독일의 협약자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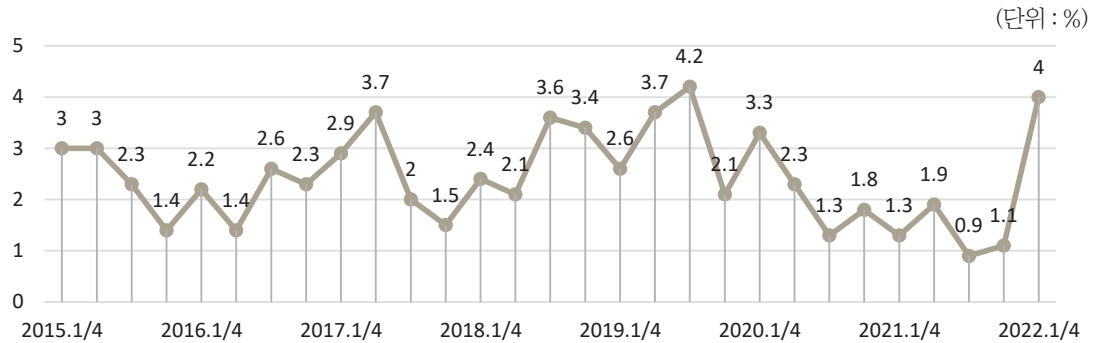
산업별 협약 체계를 기초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경제적인 위기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률에 기초한 임금 인상 기초를 유지해 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조금씩 해제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 3% 이상의 물가 인상이 시작되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 약 5% 수준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22년 1분기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7% 이상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전의 물가 수준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이다. 즉, 3월 이후부터 시작된 +7% 이상의 비정상적 물가 인상률을 예상하여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2022년 1분기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약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러한 임금 수준은 기본급과 특별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특별 상여금을 제외하면,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약 5.8% 상승하며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 변화는 2022년 2분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특별 상여금을 제외한 2022년 2분기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2022년 1분기에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인상된 산업 분야에는 보육 및 교육 분야(+5.0%), 농업 및 임업 분야와 수산업 분야(+4.9%), 공공행정·군인 및 사회복지 분야(+4.6%)가 해당한다. 해당 분야 주 단위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한 각 주 및 지방 공무원들에게 2022년 1분기 지급된 특별 상여금은 인상된 급여 수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분야의 경우 해당 특별 상여금을 제외하면 보육 및 교육 분야는 0.3%, 공공행정·군인 및 사회복지 분야는 0.8%, 농업·임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1.6%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도 상여금을 포함한 단체협약상 임금 인상률은 +4.8%였다. 제조

3) Dribbusch, H., and P. Birke(2012),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s://library.fes.de/pdf-files/id-moe/08986.pdf> (2022.8.22).

4) destatis, "Tarifverdienste im 1. Quartal 2022: +4,0 % gegenüber dem Vorjahresquartal", 2022.5.30.

[그림 4]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단체협약상 월급여 변동률(상여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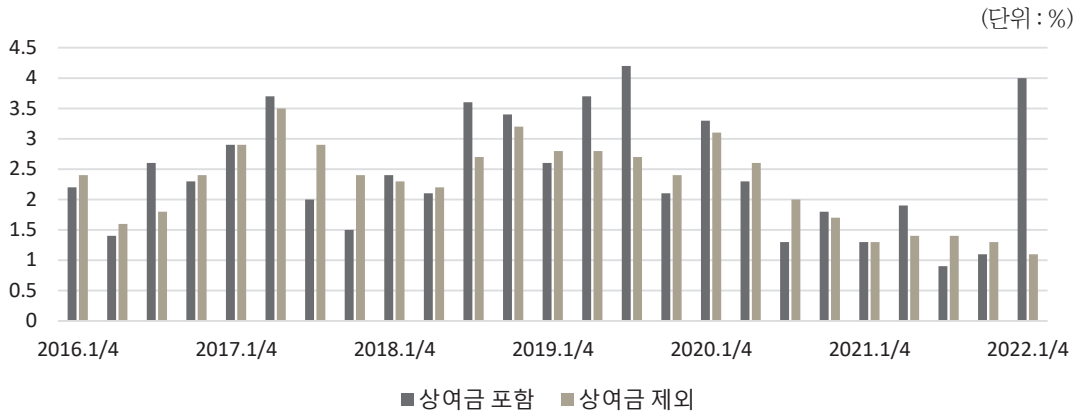
자료: destatis, “Tarifverdienste im 1. Quartal 2022: +4,0 % gegenüber dem Vorjahresquartal”, 2022.5.30.

업에서는 특히 금속 및 전자산업 분야가 특별 상여금이 전체 인상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본 산업의 경우 해당 상여금을 제외하면 임금 인상률은 0.7%에 불과하였다. 특별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2022년 1분기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이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평균 이하인 산업 분야에는 에너지 공급사업(+0.7%), 금융 및 보험업(+1.3%), 수도공급 및 폐기물 처리업(+1.9%) 등이 해당하였다.

독일의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은 특별 상여금의 포함 여부가 임금 인상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단체협약상 임금 수준 인상은 경기상황에 맞춰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급을 인상하여 물가 수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단체협약에서와 같이 기본급 인상이 아닌 일시적 특별 상여금 인상을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이 이례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인플레이션의 경우 공급 부족에 기인한 물가 상승으로서, 향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물가도 다시 일정 부분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교섭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화학산업, 인쇄업, 철강 및 금속, 건물청소 관리업, 호텔 및 숙박업, 섬유업, 보험업 등과 함께 시간제 노동자들로 결성된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림 5]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단체협약상 월급여 변동률 비교



자료 : destatis, "Tarifverdienste im 1. Quartal 2022: +4,0 % gegenüber dem Vorjahresquartal", 2022.5.30.

<표 1> 2022년 상반기 단체협약 체결 현황

산업 분야(지역적 적용범위)	협약 당사자	단체협약 체결일	조합원 수
화학산업(연방)	화학산업노조(IG BCE)	2022.4.5	578,500
인쇄업(연방)	서비스노조(ver.di)	2022.3.29	124,800
철강 및 제철산업(북서 및 동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2022.6.15, 2022.6.17	87,800
건물청소관리업(연방)	건설노조(IG BAU)	2022.6.2	487,100
호텔 및 숙박업(바이에른 주)	식료품 및 숙박업 노조(NGG)	2022.3.9	142,300
섬유산업(동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2022.5.5	9,800
보험업(연방)	서비스노조(ver.di)	2022.4.1, 2022.4.2	169,000
계약직 노동자(연방)	독일노총 공동교섭단 (DGB-Tarifgemeinschaft)	2022.6.21, 2022.6.22	835,000

자료 : Hans Böckler Stiftung(2022), "WSI-Tarifarchiv", <https://www.wsi.de/> (2022.8.22).

주요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노총(DGB) 산하 화학노조(IG BCE)가 2022년 4월 5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5월에 일회성 상여금으로 1,400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6월에 체결이 이루어진 건설노조 산하 건물청소관리업의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급여를 9.7%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이라기 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일자와 시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노조(ver.di)에서 2022년 4월 체결한 보험업 분야의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 인상 외에 2022년 8월 이전 550유로의 상여금과 2023년 5월에 추가적으로 일회성 상여금을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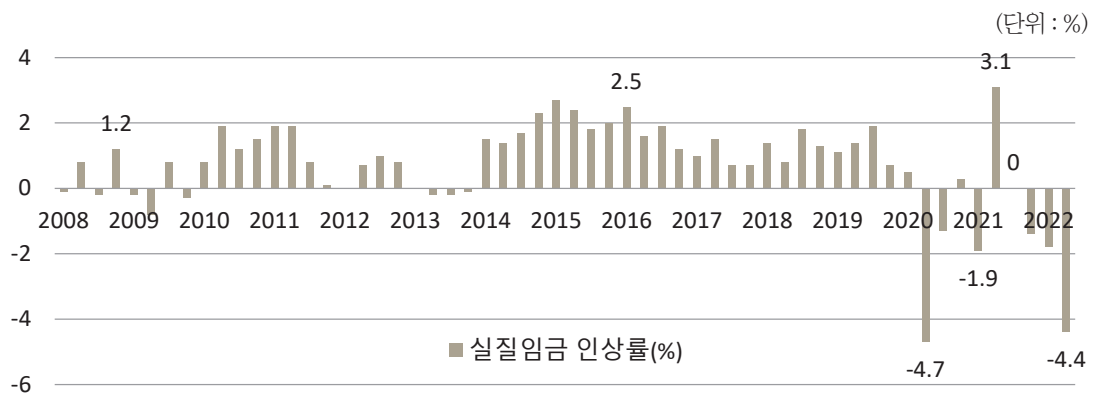
한 바 있다. 독일 노총에서 구성한 공동교섭단은 계약직, 파견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2022년 6월 20일과 21일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안을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일회성 상여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독일의 실질임금 수준

소비자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인상되며 실질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실질임금지수는 2022년 2분기에 -4.4%를 기록하였다. 코로나 시기 이전까지 독일의 명목임금은 단체협약 체계를 통해 가능한 한 물가 상승률에 준하여 조정되고 있어 실질임금 수준 역시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이처럼 물가 인상률에 준하는 명목 총액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금교섭은 사실상 독일의 물가 인상률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일의 경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정적인 임금 인상률은 물가 변동성을 경기의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불황이나 노동시장의 개혁,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여러 이슈에도 독일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비정상적 소비자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급격한 실질임금 수준 하락은 독일에서 경험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임금지수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분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봉쇄정책

[그림 6] 전년동기대비 독일의 실질임금 수준 변동률



자료 : destatis, "Hohe Inflation führt im 2. Quartal 2022 zu Reallohnrückgang von 4,4 %", 2022.8.29.

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마비되며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2021년 4분기부터 실질임금 수준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소비자 물가 인상에 따른 여파로 볼 수 있다.

■ 독일의 물가 상황에 따른 대응정책

독일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경기 변동성이 아니라 국제 경제적인 측면,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국제 공급 거래망의 붕괴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의 에너지 공급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금융정책들과는 별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시행이 시급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유가 대응정책이 필요하였다.

교통비 할인정책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가계경제의 부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연료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9유로 티켓'을 도입하였다. 이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근거리 대중교통 티켓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지만 이 티켓의 경우에는 독일 전역에서 근거리 대중교통(버스, 전철,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일교통기업연합(VDV)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9유로 티켓의 6월 이용권은 약 2,100만 장이 판매되었으며, 기존의 대중교통 장기 이용 계약자 약 1,000만 명에게는 해당 9유로 티켓의 혜택이 별도의 구매 없이 적용됨에 따라 약 3천만 장 이상이 판매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⁵⁾ 9유로 티켓 판매에 따라 독일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약 25억

5) Tagesschau, "Gewaltiger Zuspruch und weniger Staus", 2022.6.30.

유료(약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은 9유로 티켓의 시행기간 만료로 마무리되었지만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역별 교통비 지원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⁶⁾

유류세 할인정책

또한 독일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며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자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다만 이러한 특별 세제 혜택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정책으로서, 휘발유는 리터당 35.2센트, 경유는 리터당 16.7센트가 할인된다. 더불어 7월부터는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도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2인 가정에서 연간 표준 전기사용량인 3500kW/h를 사용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부담금 227.50유로를 납부해야 했다.⁷⁾

특별 아동수당 지급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기관 및 학교 등도 운영이 중단되고 자녀 양육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기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이외에 일회성 급여인 특별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2020년에는 아이 한 명당 300유로가, 2021년에는 150유로가 지급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아이 한 명당 100유로가 책정되어 7월 말 지급이 이루어졌다.

6) Tagesschau, “Erste Nachfolger für das 9-Euro-Ticket”, 2022.8.31.

7) BMWK, “EEG-Umlage entfällt ab 1.7. vollständig”, 2022.7.1.

■ 시사점 및 전망

지속적인 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전반기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최소화하고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정부 역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들을 시급히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상 범위를 벗어난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쉽게 안정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3월 이후 7%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도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며 비정상적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균등복지단체(DPW)에서 발간한 2022년 균등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인 물가 상승기에 접어들기 이전인 2021년에 독일의 빈곤층 비율은 약 16.6%로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⁸⁾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2020년과 2021년의 빈곤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빈곤층의 증가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증가한 2022년을 지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의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나 연금생활자, 저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아직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위기를 이유로 대량해고를 하는 등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않았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 감소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고용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 상황이 단기간에 정상화되지 않자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 내부에서 장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8월로 만료된 9유로 티켓 시행기간의 연장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자나 코로나 시기 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파 성향의 자민당의 경우에는 연정 협상 당시부터

8) Schneider, U., W. Schröder, and G. Stilling(2022), "Paritätischer Armutsbericht 2022", <https://www.der-paritaetische.de/> (2022.8.22).

세금 인상은 물론 정부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해왔다. 연정의 특성상 소수 정당인 자민당의 의견이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재정부 장관직을 자민당 소속 의원이 수행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는 자민당의 입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연방정부가 증세나 재정 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방재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높은 물가 인상률이 지속되자 7월 4일 올라프 솔츠 연방 총리는 고물가 상황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사용자 대표를 비롯해 연방 은행과 학계의 대표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⁹⁾ 올라프 솔츠 총리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야스민 파히미 위원장, 독일경영자협회(BDA) 라이너 돌거 회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직후 이 회의를 ‘공동 행동(die Konzertiere Aktion)’으로 지칭하고, 향후 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각 경제 주체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어 10월로 예정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을 통한 상여금 지급, 세제 혜택 확대 등 실질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물가 수준은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독일이 처음으로 당면하게 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위기를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고자 할 것인지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I**

9) Süddeutsche Zeitung, “Scholz stimmt Bürger auf lang anhaltende Inflationskrise ein”, 2022.7.4.